

전남도, 제106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

광복회원 등 참석해 선열의 숭고한 자주독립 정신 계승

전라남도는 11일 무안 초당대학교 국제 회의장에서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계승하기 위한 제106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광복회 전남도지부(지부장 송인정)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대한이 민국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과 전남시부보훈지청장, 전남동부보훈지청장, 도내 보훈단체장과 도의원, 광복회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임시헌장 선포문 낭독, 약사보고, 기념사, 기념공연, 독립국가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선열의 숭고한 자주독립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뜻을 담아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임시정부의 첫 헌법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을 초당대학교 학생 2명이 낭독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기념공연에선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원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독립을 위해 생사를 무릅쓰며 투쟁을 전개했던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노래로 표현했다.

명창환 부지사는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독립의 정당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항일무장투쟁을 활발하게 펼쳐 광복 때까지 독립운동의 든든한 구심점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의향전남’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선양과 보훈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흠여졌던 임시정



부를 통합하고 조국 독립을 쟁취한 날까지 27년간 민족 독립운동의 구심체로 역할을 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은 정

북구, 청년 부부 결혼식을 무료로

오는 30일까지 ‘우리두리 작은결혼식’ 참여 부부 모집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청년 부부에게 무료로 결혼식을 열어주는 ‘우리두리 작은결혼식’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우리두리 작은결혼식’은 소박한 결혼문화를 장려하고자 구비 천만 원을 투입하여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예비)청년 부부에게 웨딩 패키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만 19~39세 청년 중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소가 북구이고 중위소득이 130% 이하면서 경제적 어려움 등 개인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로 오는 30일까지 총 3쌍의 부부를 모집한다.

대상자 선정은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정도 및 신청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오는 5월 중 최종 발표할 계획이며 최종 지원 대상자에게는 ▲웨딩홀 대관 ▲예복 대여 ▲헤어·메이크업 ▲사진 촬영 및 앨범 제작 등 예식 서비스 전반을 지원한다.

북구는 이번 사업에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작년까지 합동으로 진행했던 결혼식을 올해부터 개별결

혼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예비)청년 부부가 희망하는 날짜를 우선으로 하여 오는 9~10월 중 문흥동 까사디루 체 웨딩홀에서 본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부부는 북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지 사항을 참고하여 구비서류를 사업 수행기관인 우산종합사회복지관(북구 중문로 55)에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woosanbokji@hanmail.net)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산종합사회복지관(☎062-266-3851)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및 개인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청년 부부에게 평생 남을 추억을 선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결혼식 지원을 비롯하여 출산 및 육아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19년부터 ‘우리두리 작은결혼식’ 사업을 시작하여 총 20쌍의 취약계층 부부가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송현근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푸른길 공원 맨발 산책로 및 청소년 쉼터 조성 사업을 본격화한다.

관내 주민들과 청소년들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도심 속 녹색 공간에서 한층 풍성한 문화생활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남구에 따르면 푸른길 공원 보행환경 개선 및 청소년 쉼터 조성 사업이 오는 5월부터 시작된다. 남구는 그동안 해당 사업에 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주민들의 요청 사항은 지난 3월말에 열린 실시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 내용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광주 남구, 푸른길 공원 맨발길 조성 본격화

올해 신규 사업, 숲속 치유길 3곳·청소년 쉼터 등 마련키로

주민들이 제안한 내용은 맨발 산책로 1개 구간을 추가해 총 3곳에 조성하고, 장산초등학교와 청로정 사이에 숲속 독서 및 명상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또 맨발길 주변 조명 설치와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푸른길 공원 맨발 산책로와 청소년 쉼터 조성에 소요되는 기간은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 가량 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 대상지역은 백운교차로에서 진월동 동성

교 입구까지 약 2.3km 구간이다.

먼저 맨발 산책길은 푸른길 공원 숲길에 위치한 대성여고 입구쪽과 한신아파트, 장산초등학교 인근에 각각 마련된다.

푸른길 경관과 가장 잘 어우러지는 건식 맨발길로 조성하는데,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블라드 경관 조명과 산책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순환 산책로를 만들기로 했다.

청소년 쉼터는 중·고등학교가 밀집한

동성과 입구쪽에 조성키로 했다.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원형 광장을 활용하고,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은 수경시설을 철거한 뒤 그 자리에 공연 마당 등 청소년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독서·휴식 공간은 푸른길 도서관과 가까운 곳에 있는 지점에 조성되며, 장산초등학교에서 주월 빗여울재 아파트 사이 숲길에는 주민 쉼터도 들어선다.

남구 관계자는 “관내 주민들이 푸른길 공원에서 휴식과 독서 등 여가 및 문화생활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심 속 테마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채일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14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재난·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2025년 동구 집중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다중이용시설·교량 등 총 78개소 12개 시설유형으로 중앙부처 선정 기준, 주민 설문조사 및 주민 점검 신청제로 접수된 곳을 선정했다.

특히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구조물·전기·가스·소방 등 모든 분야를 민간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

2025년 동구 집중 안전 점검 추진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위험 요인 사전 발굴·해소

이다. 기존 시각적·기본 점검 방식에서 탈피,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점검을 통해 안전 점검의 정확성을 높이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조기 발견·조치할 예정이다.

각 시설의 점검 결과에 따라 ▲현지 시정 ▲정밀안전진단 ▲긴급 안전조치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설관리 주체에게 보수·보강을 요청할 방

법이다.

점검 결과는 분석·성과 보고를 통해 향후 안전 정책 수립에 반영된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기록·관리되며,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

‘주민 점검 신청제’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주민이 요청한 시설에 대해

우선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민간 협의체와 협업체 주민 주도의 안전 점검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집중 안전 점검을 통해 동구 내 안전 사각지대를 사전에 해소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11일 서구문화센터 2층 공연장에서 관내 공동주택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및 방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서부경찰서, 서부소방서와 함께 진행됐으며 최근 공동주택 화재 등으로 높아진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구, 공동주택 소방안전·방범 교육 실시

화재 대응·심폐소생술·생활 법률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

이 자리에는 관내 166개소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와 경비책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등 생활안

전 교육 ▲공동주택 화재 대응 및 세대 내 점검 방법 ▲공동주택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기법 ▲CCTV 열람 등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속 법률 상식 등 실무 중

심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윤옥민 주택과장은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관리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1면에서 이어짐

방역 당국은 축종별 첫 발생농장인 만큼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사육종인 돼지 5470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문제는 전파력과 발생장소다. 돼지는 소에 비해 바이러스 검출량이 최소 1000배, 무게는 3000배 가량 많아 전파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 발생지인 무안은 75개 양돈 농가에서 돼지 24만5100여 마리를 사육 중이다. 전남 전체 양돈 농가(480곳)의 15.8%, 사육 두수(138만6500마리)의 17.7%를 차지하고 있다. 두수만 놓고 보면 전남에서 가장 많고, 2위 나주(17만7295마리)보다 7만 마리 가량 많은 독보적 1위다.

무안과 맞닿은 나주, 영암, 함평, 목포, 신안 등 5개 시·군으로 범위를 넓히면 양돈농가는 239농가로 전남 전체의 49.8%, 두수는 68만4600마리로, 49.4%에 이른다. “한 번 똥리는 끝장”이라는 위기감이 컸던 까닭이다.

더욱이 발생 농장의 경우 지난달 중순 백신 접종을 마쳤고 축종별로 점검도 없는 상황에서 무증상 감염돼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발생 농장의 백신 항체 양성률이 98.4%에 달해 이른바 ‘돌파 감염’ 개연성도 제기된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 바이러스는 위아 가벼워 공기 중 전파 사례가 많다”며 “최대한 방역대 안에 가둬두고 집중 소독 등으로 확산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초 4월 중순께로 예상됐던 구제역 종식 선언은 빨라야 5월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종식선언은 마지막 살처분 시점으로부터 3주일이 지난 뒤 방역대 내 전수조사 결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비로소 가능하다.

방역 당국은 주말과 휴일에 바람이 많이 불었고, 유동인구가 많은 행락철이 5월 까지 이어지는 점도 주목, 구제역 종식 선언일까지 인근 시·군으로의 수평 감염 차단 등 고강도 방역에 올 인하고 있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과장은 “매일 농장 청소·세척·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축산차량 출입 통제 등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무안 발생농장 3km 방역대를 기존대로 유지하고 이동제한 기간은 3주간 연장했다. 전국 우제류(소·돼지·염소·사슴 등) 농장 종사자와 차량 등에는 오는 13일 오후 3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전남 10개 시·군에 내려진 구제역 심각 단계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축산시장 개장도 보류키로 했다.

/염선호 기자

